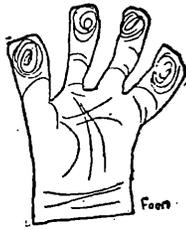


祖國에 부치는 글

民族의 悲劇을 끝내는 捷徑은
統一 韓國의 中立을 宣揚하는 일이다.



金 三 奎

〈前 東亞日報 主筆 在 東京〉

四月政變을 환영하는 마음이 크면 클 수록 이 政變에 희생이 된 英靈에 애도의 뜻을 표하지 않고 이 글을 쓸 수가 없다.

四月政變의 기본적인 의의는 國民의 생활과 기본적인 인권을 확보하여 진정한 民主國家를 건설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韓國國民의 이 民主建設에의 의욕을 죽이지 않고 더욱 왕성하게 유도하는 것은 爲政者의 基本的인 임무라고 할 것이다.

李政權은 打倒되었으나 그 잔당과 亞流는 아직도 그 추잡스러운 蠱動을 중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추등을 一舉에 소탕하지 못하는 데 民主主義의 약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不純分子의 蠱動을 엄격히 감시하며 서서히 제거하는 노력은 그러기에 국민의 基本的인 權利요 의무다. 될 때로 된 나머지다. 항상警戒와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李政權의 惡政에 의하여 韓國은 하마트면 아세아의 孤兒가 될 뻔했다. 在日同胞까지도 韓國에 질망하여 北韓으로 가는 형편이었다. 길으로는 안이한 排外感情위에 앉아서 反共, 反日만 외치고, 뒷구멍으로는 政商 奸商 謀利挾雜輩들과 사바사바하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內政도 없었거니와 外交도 없었다. 今後에는 反共, 反日을 유달리 외치는 者를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反共의 名目下에 殺人 強盜 橫領暴力을 자의로 했고, 反共의 명목하에 國民의 基本的인 권리를 모조리 박탈하였고, 반공의 명목하에 野黨까지도 빨갱이로 몰려 고하지 않았는가. 韓國國民이 共產主義를 싫어하는 것은 너머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 國民感情에 啊附追隨하여 反共을 유달리 외치는 者가 있다면 그 者는 民主建設보다도 광소獨裁를 원하는 者라고 생각해서 代제를 입었을 것이다. 念佛보다도 戔鬩만 생각하는 者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진정한 反共은 民主建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활과 인권을 확보하고 국민 스스로 民主主義의 우월성을 체득시키는데 있다. 奸商謀利輩의 跳梁을 허용하는 自由, 脫稅를 허용하는 汚吏의 自由, 失業者 사대가운데 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自由, 高利貸金業者의 이기심을 만드는 自由,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공포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自由——이 따위 自由는 모조리 스페기통에 내던져 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국민이 요망하는 民主建設은 국민의 생활과 인권을 확보하는데 있다. 全世界의 인權狀況로 들어갔다. 經濟建設에 있어서의 맹렬한 競爭으로 들어갔다. 朝鮮은 美國을 상대로, 中共은 英國을 상대로 生産競爭을 시작하였다. 아직은 西方側이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十年後를 확인하기는 어렵울 것이다. 아무리 民主體制가 좋다 하더라도 이 生産競爭에 진다면 대단히 어려운 局面에 이르러 버린다. 鐵板한 反共을 시고렵게 외치는 시간이 있으면 못한箇, 鐵板한 장이라도 더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反共, 입으로 반공을 외치면서 뒤로는 ICA 資金을 협잡해 먹는 그 따위 反共은 李承晩이와 더불어 스페기통에 던져 버리는 것이 効果的이다. 다시는 협잡을 못하도록 爲政者의 自由는 되도록 제한하고 국민의 創意性을 발휘시키는 자유는 되도록 확대하여 民主建設을 촉진시키는 국가의 계획성이 확립되어야겠다. 특히 貿易의 自由化는 이 段階에서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 國內의 經濟建設에 부합되도록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爲政者와 국민이 혼연히 협심하여 民主建設에 매진하는 기풍을 振作하는 것이 緊要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韓國國民이 그렇게 노력만 한다면 李政權의 惡政이 빚어낸 궁지에서 회생할 길이 타개될 것 같다. 對美關係의 調整, 對日關係의 正常化와 더불어 在日同胞事業家를 國內建設에 優待誘導함으로써 더욱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의 民主建設이 촉진된다면 在日同胞의 北送은 자연히 중지될 것이다. 재일동포의 九七%가 南韓出身이니 南韓에 희망을 붙일 수 있다면 山登고 물신 北韓으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民主建設에의 체제를 갖추어야 할 이 시기에 北送中止를 떠드는 것은 對內的으로나 對外的으로나 得策이 아니다. 그보다는 八月에 新內閣이 성립되면 되도록 빨리 韓日會談을 재개하여 第二次大戰中 動員된 二百餘萬의 徵用者와 學兵에 대하여 人道의 인 보상을 요구하고 在日同胞들에 대한 人道의 인 처우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得策인지 모르겠다. 교섭여하에 따라서는 韓國의 民主建設을 위하여 장기적인 借款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民主建設은 다만 惡政에서의 起死回生이 될뿐 아니라 또한 南北統一의 民族의 使命을 달성하는데 큰 서광을 주는 것이다. 三千萬이 염원하는 南北統一은 平和的으로 民主主義方式에 의하여 달성되는 길이외에는 없다. 전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그 길 밖에 는 없지 않은가. 平和的으로 한다는 말은 東西兩大陣營間의 協議와 타협에 의한다는 말이요, 民主主義方式이란 말은 南北을 통한 自由總選舉로 統一政府를 수립한다는 의미이다.

統一中央政府를 수립하는데 추진자인 三千萬人民의 자유스럽고 공정한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國際管理에 의한 自由總選舉를 실시하자는데 민주한국이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한국정부가 國聯에서 승인된 合法政府라 하더

라고, 國聯決議에 의한 남북통일의 조속한 실현의 재확인
 國聯總會의 연중행사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승인이 통일정부 실현에의 과도적 조치에 불과하였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도적 조치는 그러기에 그 合法政府
 가 그대로 통일정부가 된다는 혹은 그 정부가 統一政府
 의 母體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三千萬人民의 의사에 매여 있으니 共產主義
 者에 나라를 빼앗기기 싫거든 인민의 지지를 얻도록 民主
 善政에 전력을 경주하여야 하겠거든, 오히려 그 合法性을
 口實삼아 공허한 反共만 외치면서 가진 협잡과 횡포를 자
 의로 하며 국민의 불만을 경찰과 反共暴力團으로 抑壓하고
 통일을 희원하는 민족적 염원을 反逆視한 李承晚이야말로
 反民特委의 대상자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韓國政
 府가 國聯이 승인한 합법정부라고 해서 南北自由總選舉에
 의한 통일정부의 수립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통일을 희구하는 全民族
 의 염원에 대한 불손한 도전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오히려
 內閣責任制로의 改憲에 제하여 그 前文에 南北統一
 을 강조하고 統一祖國의 실현에 전력을 정도하는 것은 한
 국민의 民族的使命이란 점이 고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自由總選舉에 의한 南北統一의 실현은 그러나 美·소를
 위시한 東西兩大陣營의 협의와 타협없이는 구현되지 않는
 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문제에는 있어서 東西兩大陣營間에
 타협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는 것은 통일을 염원하는 韓民
 族의 국제적 의무요 책임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일이 이처럼 늦은 것은 獨逸과 같이 強國
 이어서 이웃 나라가 統一을 두려워하기 때문도 아니요,

美·소가 韓民族의 민족자결에 반대하는 까닭도 아니다. 統
 一韓國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관계각국의 안전보장에 중
 대한 威脅이 되기 때문이다.

즉 統一韓國이 어느 一方의 세력권에 속하여 그 편의 軍
 事基地가 되는 경우에는 他方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하면 一方의 세력권에 들어가서는 그러한 統
 一韓國에는 他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三年에 공
 한 전쟁을 통하여서도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한 일방
 적인 통일에는 他方이 반대하니 차라리 분단된 채로 유지하
 자는 것이 현상인데 이러한 分斷狀態는 韓民族의 經濟的政
 治의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을뿐 만 아니라, 極東에 있어서
 의 긴장과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極東에서
 새우등 터진다고 전번 전쟁에도 상당히 터져서 혼이 났지만
 다음에 또 터지는 경우에는 地上에서 韓民族이 일소될지도
 모르겠다. 隣國인 日本과 中共은 昇天之勢로 부흥진설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전민족적 역량을 동서간의
 냉전을 대행하는데 소모해 버린다고 해서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진국가가 되고 말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韓國이 당면한 基本課題는 兩大陸營에 충성을
 다하는 체하여 反共이니 反美니 하고 떠들게 아니라 스스로
 의 民主建設에 매진하면서 統一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대진
 영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타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면 兩大陸營이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일방적인 통일 즉 타방이 반대하는 분단된 現狀維持는 쌍
 방의 불안과 긴장의 원인일뿐 아니라 韓民族의 自滅을 의
 미하는 이상, 妥協點이 될 수 있는 것은 統一韓國이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길 밖에 없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統一韓國을 양대진영의 緩衝地帶로서 중립화하고 중립한국

의 주권과 영토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길 밖에 없지 않는가.

北韓에서는 통일을 위하여 南北協商을 하자고 중사담경 임듯이 協商打鈴만 하지만 反米鬭爭을 선전하자는 協商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도대체 南北協商을 하지 않아서 통일이 안되는 것인가. 萬一 北韓이 참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첫된 선전을 그만두고 통일된 祖國의 中立化에 贊成하는 것이다. 共產化된 統一韓國은 共產圈에 隸屬되는 것이니 民族의 자주성을 구할 길이 없을뿐 아니라 日本과 美國을 적으로 삼게 되니 그러한 統一祖國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겠는가.

그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韓民族이 世界平和와 民主主義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통일독립을 달성하고 문화적인 福祉國家를 건설하려면 통일된 조국을 中立國으로만 드는 것이다. 이러한 中立祖國이 실현되어야 極東에 있어서의 兩大陣營의 불안과 긴장이 완화되고 韓民族의 民族自決도 달성된다. 南北을 포함해서 關係各國의 國際會議 혹은 國連會議에서 彼此間에 타협할 수 있는 점은 統一韓國의 中立化뿐이다. 그러기에 나는 진정한 통일은동은 中立化運動이라고 생각한다.

南北統一選舉에 대하여서는 제비바會議에서 意見一致를 본 것이니 統一選舉를 표면에 내걸면 되지 않는다. 나는 意見이 나올 법하다. 그러나 統一選舉를 할 줄 몰라서 통일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한국이 어디로 가느냐가 명확치 않으니 통일선거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대 통일한국은 중립한국이라는 것을 뚜렷이 내걸지 않으면 관제각국을 안심시킬 수가 없고, 통일에 대한 韓民族의 이러한 의사가 명확히 되지 않는 限 관제각국은 이 핑개 저

핑개로 그 통일선거를 지연시킬 것은 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北韓同胞들은 의사표시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실혹 우리의 統一構想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표명할 길이 없으니 南韓同胞들이 全民族의 의사를 代辯하여 널리 國際的으로 呼籲하는 길 밖에 없지 않는가. 그것이 南韓同胞들의 民族的義務라고 생각한다.

民主建設이 바쁘니 統一問題는 當分間 덮어두라고 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큰 착각이다. 통일에 대한 확고한 構想과 信念과 용기가 없이는 무슨 建設인가. 統一獨立달성은 당면한 民主建設의 목표요, 統一獨立은 文化的인 福祉國家에의 출발점이다. 뚜렷한 목표없이 右往左往 하다가는 日暮途遠의 歎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순간에도 反米協商打鈴은 南韓同胞들에게 침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선전모략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용기를 주는 것은 뚜렷한 統一에의 구상뿐이다. 統一韓國에 대한 명확한 구상없이 한국의 民主建設을 기대하는 것은 椽木求魚와 도 같은 일이다.

목표가 명확치 않은 民主建設은 磁針을 잃은 배와도 같이 배는 현실적으로 東으로 가고 있는데 西로 가고 있다고 獨斷하는 獨善이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는가. 信念과 勇氣를 缺한 民主建設이 그날 그날을 糊塗하다가 또다시 몇 사람의 私腹을 채우고 마는 民主建設이 안된다고 누가 보증하는가.

民主建設과 統一獨立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基本的인 課題이다. 이 基本的인 課題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과 명확한 構想을 제시하는 것은 爲政者로서 迴避할 수 없는 基本的인 임무라 할 것이다.